

# 광주시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실패

### 거주형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시설 3년간 민관 협력·범시민 지원 허사 익산시와 경쟁서 밀려 탈락 '당혹' 국가사업 유치 등 전략 마련 시급

광주시가 호남권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국립 치료·재활시설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디딤센터)'에 실패했다. 뒤늦게 유치전에서 뛰어난 전북 익산시에 밀린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가 3년 넘게 이어진 범시민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와의 경쟁조차 이겨내지 못하면서, 국가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현장 실사를 하고 디딤센터 건립지로 전북 익산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광주시는 2019년 말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타당성 용역을 거쳐 익산시와 공모에서 경쟁했다.

광주는 전남 및 제주 지역 학교와 아동·청소년 시설·시민단체·사회복지기관 등 174개 기관과 상담

사, 교육복지사 등이 동참하는 유치준비위원회까지 출범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 지지 서명운동 등도 펼쳤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특히 이번 선정 결과 발표 전부터 익산시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장, 부시장, 후보지(광산구) 구청장과 부구청장까지 실사 현장을 찾아 막판 설득에 나서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허사였다.

호남 거점 광역단체를 자처하는 광주시는 기초단체와 경쟁에서 밀린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전북에는 김제 청소년 농생명센터, 무주 청소년 인터넷 드림 마을 등 청소년 국립 시설 두 곳이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의 이번 유치 실패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시는 디딤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 이용 규모는 물론 제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호남권역 내 교통요충지인 지리적 이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연계시설, 청소년상담사 등 풍부한 인적자원 등이 강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가지표 등이 광주에 불리하게 적용돼 수차례 이의 신청을 하고, 지역 출신의

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각계에서 많은 도움을 줬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설립 운영하는 '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자립·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에서 경기도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2012년 개관)와 영남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2021년 개관)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권역(광주, 전남·전북, 제주) 청소년들은 시설 이용 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도, 접근성 한계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개인상담 중 정신건강 영역은 2019년 1만 8812건에서 2021년 2만 7678건으로 47.13% 증가했으며, 1388전화상담 건수도 2019년 1168건에서 2021년 2859건으로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학교폭력·가정폭력·재난 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불루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 결정 '공론화위원회' 자치분권 모범 사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문경 일원에서 '제6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워크숍'을 열었다. / 대구시 제공

##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 <3> 광주-대구 지방분권 선도도시

### 대구 지방분권 수록 '참 좋은...' 초등 4년 사회과 교재 사용

대구시는 국내 대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통한다. 지난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 2012년 9월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지방분권협의회(25명)'를 창립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을 심의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민선 6기에는 시장 공약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됐고, 그 결과 2015년 7월 분권추진 전담 조직인 '분권선도도시추진팀(분권추진팀)'이 발족했다. 분권추진팀은 지방분권을 대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뮤지컬 버스킹, 플래시몹 공연, 콘텐츠 공모전, 토론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지방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교육청,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지방분권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 지방분권 내용이 수록된 '참 좋은 우리 대구'는 2017년부터 초등 학교 4학년 사회과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는 정두용 분권선도도시추진팀장은 "지방분권을 하면 지방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털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예산 규모를 높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격차는 줄어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시는 '3·9 대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이후 지방분권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는 ▲'지방분권 국가' 지향 선언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입법권강화 ▲자치행정권 강화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자치사법 및 분권사법제도 설계 등이 담겼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는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관해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공론화를 추진했다.

광주 시민을 대표한 243명의 시민참여단은 약 13일간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찬반 여부를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찬반 양측의 주장, 찬반 양측 주장에 대한 자문위원의 의견, Q&A, 종합토론회(1박 2일)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당시 "지금까지 주요 정책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직접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는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의 주요 현안을 시민 모두의 생활이슈로 끌어내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결정했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치분권을 이뤄낸 것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관련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열린 광주지방분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광주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광주시가 마련한 종합계획에는 ▲자치분권 기반 확충 ▲자치역량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강화 등 5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적극 협조"

###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강 시장은 새병원 건립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연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16일 오전 11시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 주성필 대외협력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함께 새병원 건립을 논의했다.

안 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노후화된 건물로 시민들의 불편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등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절실하다"며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광주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진다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 통과되까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치료의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사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라며 "새병원 건립이 신속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나서라"

### 실국장 정책회의서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준비한 게 전남도인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다른 지역 자치단체들보다 먼저 준비했는데, 체감할 액션플랜이 부족하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오는 9월 30일께 예정된 재경향우회 방문에 맞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담당 부서의 설명에는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평소 화법과는 사

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움직였음에도 차별화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 지사는 또 김대중·넬슨 만델라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지지부진함도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추진 의사를 피력한 뒤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안한 듯 "지사가 챙기면 하고 안 챙기면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지사는 DJ 서거 11주이었던 지난 2020년 8월 김대중·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소금 박람회'를 계기로 신안 천일염에 대한 적극적 홍보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지난 2009년부터 13년 간 소금 박람회를 진행해왔지만 신안·영광

등 전남 천일염의 신규 판로개척과 천일염 산업 세계화·명품화 및 우수성 홍보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지사 판단이다.

김 지사는 "전남 천일염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전남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박람회를 계기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